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5. 4(금) / 총 7매(본문7)
담당 부서	국토정보 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형석, 서기관 이상옥, 주무관 윤형석 • ☎ (044) 201-3458, 3465, 3467
보 도 일 시		2018년 5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8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스마트코리아 만든다



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... 4대 추진전략, 12개 과제 도출

- 국토교통부(장관: 김현미)는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「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('18~'22)」을 확정·발표한다.
 - *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여,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,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·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
 - 이번 위원회에서는,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심의·의결하는 한편,
 -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공간정보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인천시의 「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사례」와
 -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사례로서 KT의 「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주유소 자동결제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개발현황」을 보고받으며,
 -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, 중앙과 지방 간, 민·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.

-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, 이번 제6차 계획은 초연결성,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미래사회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
 -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
 - 특히, 공간정보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융복합의 핵심으로서, 스마트시티, 증강현실, 디지털트윈(Digital Twin)*의 구현과 자율주행차, 드론 등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대두했음을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였다.

* 컴퓨터(가상세계)에 현실 속 사물(현실세계)의 쌍둥이를 만들고,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(시뮬레이션)하여 예측하는 기술

【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의 역할 】

	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성 정밀측위와 함께 정밀도로지도 구축·갱신 등이 필요
	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방대한 센서데이터의 취합·분석·가시화가 필요

-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“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”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.

추진전략	중점 추진과제
[전략 1. 기반전략]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	①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②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기반 마련 ③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
[전략 2. 융합전략]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	①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전면 개방 ② 양방향 소통하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추진 ③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정책 혁신 견인
[전략 3. 성장전략]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	①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매칭기능 강화 ② 창업지원 및 대·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③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지원 및 기반기술 개발 ④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[전략 4. 협력전략]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	① 공간정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② 협력적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

□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기반전략)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

○ 우선,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.

- 현재는 도엽단위, 정기갱신(2년) 위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으나, 이를 객체 중심,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하고 객체단위 데이터베이스(건물, 도로, 철도, 수계 등)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·제공할 예정이다.

* 사용자 요구에 따라 주제별(건물, 도로 등), 시점별(연도, 계절, 월 등), 영역별(행정구역, 격자형 구역 등), 형태별(파일포맷)로 맞춤형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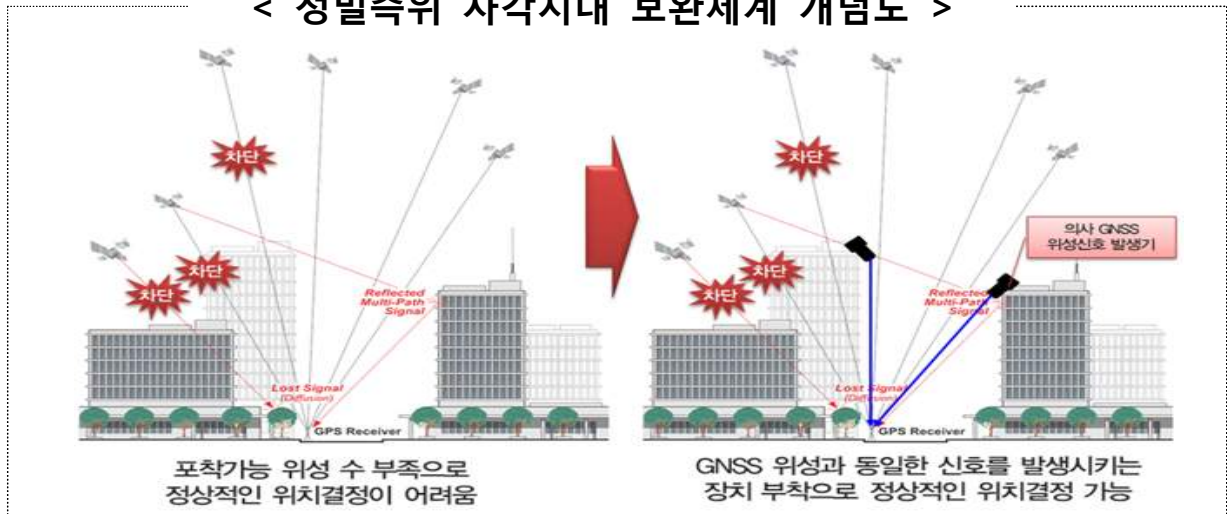


- 아울러 건축행정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* 를 통해 수시 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변화된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,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, 도로대장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고, 변화내용은 국토정보플랫폼(map.ngii.go.kr)을 통해 실시간 제공

○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해서는 정밀한 위치 파악이 매우 중요하므로 터널·빌딩숲 등 위성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시·공간 끊임없는 위치기준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.

< 정밀측위 사각지대 보완체계 개념도 >



- 자율주행차,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* 서비스 대상 확대** 및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

* 중앙국시스템 이중화, 정밀측위 수신기·전력·통신 등 노후장비 교체 등

** 저가형 수신기에서도 정밀한 위치결정이 가능하도록 오차요인을 오차 성분별로 보정정보를 생성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

-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감대 형성도 추진할 계획이다.

② (융합전략)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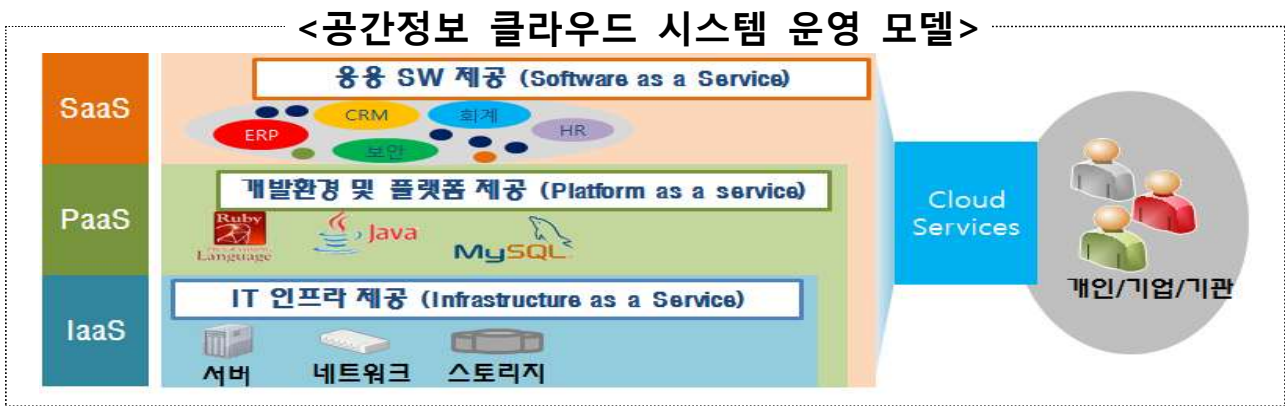
-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.

-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,

- 민간의 수요가 높으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과세 등의 공간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해 나가고자 한다.

* 공간정보의 부처 간 연계 제도화, 민간개방 여부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

- 혁신과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목적·다형식의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, 접근성·활용성 등을 두루 갖춘 연계 데이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공간정보 클라우드* 환경을 조성하여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는 동시에,
 - * 집적·공유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처리체계



-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기로 하였다.
-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, 공간 빅데이터 체계 기반의 정책 수립 확산을 추진한다.
- 특히, 안전·방재, 균형 발전, 도시재생 등 국민 참여 수요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활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.

③ (성장전략)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

- 공간정보가 정보통신기술(ICT)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되고 있음을 감안(12년 이후 매출액 기준 연11%이상 성장)하여, 특성화고·전문대·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,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.

- 또한,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매(약 1억 4천만원 소요)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창업-준비-도약의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 공간·자금·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< 공간정보 창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>


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을 지속하고, 기반기술 개발에도 매진한다.



<3D 정밀지도>

<실내공간정보>

<자율주행용 정밀지도>

-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차세대 도로교통체계(C-ITS) 등 도로·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'2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5,500km에 대해 구축하고,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·갱신·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.
- 게임, 관광,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3차원 및 실내 공간정보 등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개방할 계획이며,
- 센서,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공유·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고,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공간정보가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시티 등의 신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.

④ (협력전략)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

○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제도 기반을 재정비하고 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간정보 지속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.

- 측위, 3차원 공간정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간정보 3법*을 체계화하고,

* 국가공간정보기본법,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, 공간정보 산업진흥법

- 공간정보업계의 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보안 기준의 합리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융·복합 활용을 통해 가치창출이 이뤄지는 공간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처·기관 간, 산·학·연 간, 중앙·지방 간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

- 공간정보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유관기관* 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,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* 국토부, 국토지리정보원, 한국국토정보공사, 공간정보산업진흥원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,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”며,

○ “이번과 같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,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이상옥 서기관(☎ 044-201-34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